

차례

머리말/홍성우 • 4

| 프롤로그 | 대답을 시작하면서 • 19



제1부_1970년대 인권변론

1971년 사법파동과 변호사 개업

사법부 육체기와 법관들의 사표 • 35

민청학련 사건으로 인권변론의 길로 들어서다

법정에 올려펴진 애국가 • 53

“인권변호사” 진용의 형성

이돈명, 조준희, 황인철, 홍성우의 결합 • 101

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과 이병린 변호사의 수난

“눈물도 얼을싸하여 손수건에 담노라” • 107

백낙청 교수 파면처분 취소소송

유신반대가 ‘정치활동’이라면 유신지지는… • 118

“법정에 칼이 셨던” 김지하사건

법정에 올려펴진 ‘타는 목마름으로’ • 125

명동사건 (3·1민주구국선언사건)

재야민주세력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다 • 166

인권변론을 지원한 NCC와 선교자금사건

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 • 181

리영희 교수 필화사건

공소장과 똑같은 판결문 • 189

양성우 시인 필화사건

문학작품을 두고 사실왜곡죄가 가당키나 하나 • 209

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들

5·22사건과 ‘우리의 교육지표’ 사건 • 221

서울의대 간첩단사건

어머니의 구명활동 • 232

한국일보 기자노조사건

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아내다 • 240

동아투위의 민권일지사건

언론자유의 강연장이 된 법정 • 256

동일방직 노조에 대한 탄압

"우리는 뜻을 먹고 살 수 없다" • 263

청계피복노조사건

장기표-이소선-청계노동자들의 연속 재판 • 273

남조선민족해방전선(남민전)사건

유신말기의 극단처방, 그러나… • 279

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

독서씨를 만들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 • 294

오원춘사건

기차간에서 변호사들이 통곡한 사연은? • 308

변호사 흥성우 법률사무소
서울·중구 서소문동 55의4 (백재빌딩503호)
28-6868

(~~이 사건의 피해자들은~~ ~~한국 배우지도 못했고~~ ~~한국에~~ ~~가장 고마운 것을 알고, 가지려~~
~~있다.~~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
거지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이 사회에 아는게 주고
있을 것이다. 오죽지 인간에게 살수 있는 권리가
그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학생들
 통하여 와치고 즐기려고 있는 것이다 ~~아니다~~
~~죽을~~ ~~죽을~~ 9월날 이 나라의 그늘진 산업사회에
하늘날이 하 이들의 수난은, ~~죽을~~ ~~죽을~~ 가소라리
갑자기 죽하게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결이
기여할 것이다.

1983 7.

제2부_1980년대 인권변론

1980년 변호사 휴업과 김수환 추기경의 은고 • 331

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

부산·대구 오가며 피고인을 살려내기 • 348

재일동포 유학생에 대한 간첩조작사건

윤정현, 조일지 사건 • 370

송씨 일가 간첩단 조작사건

유죄와 무죄를 오간 7차의 평통재판 • 397

원풍모방 노동조합 탄압사건

항소이유서를 그토록 공들여 쓴 이유는? • 424

여성에 대한 정년차별 시정 소송

김영희사건, 여성정년의 장벽을 깨다 • 440

서울대 “학원폭락차” 사건

온순한 인간들을 열렬한 투사로 만드는 시대 • 445

민주화추진위원회(민추위)사건

양심범의 소신을 지켜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 • 457

삼민투사건

학생운동은 민주화운동의 주류 • 486

서울 미문화원 점거사건

정치변론과 인권변론, 재판거부의 차이 • 495

김근태에 대한 고문과 재판

고문의 고통과 증거를 외면한 검찰과 법원 • 511

정법회의 결성

장년층과 청년층 변호사의 결합 • 534

영천기름집 살인사건, 무죄판결 받아내다 • 542

대우자동차사건

‘위장취업’한 대학생들, 노동운동의 주역으로 • 555

대우어페럴 사건 혹은 구로연대파업

20명의 변호사들, 연대변호의 효시를 열다 • 560

훼어차일드 회사의 노동운동가 해고사건 • 567

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

인권변론 역량의 최대치를 구현 • 570

민중교육사건

교사들 법정에 서다 • 593

녹두출판사사건

사회주의권 책자의 번역은 이적인가 • 602

이돈명 변호사, ‘범인은 닉’사건으로 구속수감

‘민족이 당하는 수난에 변호사만 예외일 수 없다’ • 615

서울노동운동연합(서노련)사건

김문수·심상정·유시민의 인연 • 636

제헌의회사건 및 반제동맹사건

혁명론의 분출과 운동권의 분화 • 645

유성환 의원, “국시” 발언으로 옥살이

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한계는 어디인가 • 658

민중미학연구소(민미연)사건

소장 인문학자들을 죽여 채우다 • 667

보도지침사건

‘불낸 자는 놔두고 119 신고한 자를 잡아가다니’ • 67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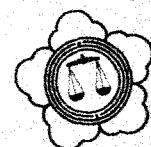
남북접촉 시도와 전민련사건

공개적인 남북접촉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탄압하다 • 689

민변의 결성과 조영래 추모모임

민중의 삶과 연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• 696

人權報告書



大韓民族士協會

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(사노맹)사건

변론의 바톤 넘겨줄 때 • 705

전두환·노태우를 내란죄로 고소하다

공소시효에 대한 해석의 전기를 마련 • 715

| 에필로그 | 마치면서 • 731

| 발문 | 인권변론의 전설을 기록화하기/한인섭 • 744

인권변론연보 • 751

인명색인 • 762

